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기재정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운용계획이다.
- ②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 ③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 ④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를 반영하며,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해설

- ① (○) 재정운영에 관한 연동계획으로서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이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종전 사용하던 중기재정계획의 한계로 인해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①번 지문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기간에 따른 단기·중기·장기재정계획 중 중기재정계획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으로서 옳은 내용이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배경배경

중기재정계획	제5공화국 이후부터(1982년~)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와 중기적 시계의 재정관리를 위하여 도입·운영
국가재정운용계획	①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 새정부 출범 등 특정한 해에만 작성되고, 개략적 투자방향 제시에 그쳤고, 단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의 연계도 미흡했으며,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 실효성도 낮았음. ② 노무현 정부는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을 보완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국정과제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04년 최초 수립. 2007년 부터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여 법적 제도화하고 매년 국회 제출을 의무화.

- ② (○) 정부는 재정운영의 효율화·건전화를 위해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 ③ (×) 예산안 첨부서류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각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되는 행정내부계획으로서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에도 국회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 규정은 없다.
- ④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의 국정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적 자원배분을 실현하며 단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틀로 활용된다(부처별 지출한도로 활용).

※ 종래의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구 분	종래의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목 적	추상적인 재정운용방향만 제시	투자방향 + 총량목표(재정수지·국가채무) + 구체적인 자원배분계획을 제시
포괄범위	일반회계 등 예산중심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기준으로 작성
실효성	재정운영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단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틀로 활용(부처별 지출한도로 활용)
	대외적으로 비공개, 재정운영 내부자료로만 활용	시작단계부터 언론 등 외부에 공표, 국무회의의 보고 후 국회에 제출하여 실효성을 높임
수립방식	재정당국 중심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연구소·분야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참여
법적 근거	임의규정(강제성 없음)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 국회제출을 의무화 함
예산편성	상향식	하향식(지출한도를 집권적으로 설정)
수립방식	연동계획방식(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보완한 연동계획임)	

답 ③

[관련기출] 예산과 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국회8급

- ① 국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여 확정한다.
-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설정한 지출 한도에 맞추어 각 중앙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도입하고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답 ①

2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이다.
- ② 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
- ③ 정책결정에 비해 외부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편이다.
- ④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실현가능한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 ① (○) 전략적 기획은 조직이 무엇이며(what an organization is), 무엇을 해야 하고(what it does),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why it does it) 등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관련된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돕는 체계화된 노력(Bryson). 조직이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생각하고 수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개념, 절차, 및 도구이다. 안정적 정책환경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기획과 달리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직 내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적 실행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성이 높은 기획을 실현하는 것이다.
- ② (×) 전략적 기획의 한계로는 ㉠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장기적으로 합리적 기획이 불가능하며, ㉢ 제한된 합리성이나 점진적 결정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략적 기획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합리모형을 바탕으로 '분석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기획의 전 과정을 매우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므로 환경과 조직역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측이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 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장기적으로 합리적 기획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전략적 기획의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부문은 자원·능력 등 내부적 환경, 국제정치상황, 경제여건, 사회문화적 제약 등 다양한 한계 속에서 민간부문에 비해 제한적으로 전략적 기획이 활용된다.
- ③ (○) 전략기획의 과정은 전략적 기획에 대한 합의 → 미션·비전 확인 → 환경분석(SWOT분석) → 주요 전략적 이슈 분석 → 전략적 기획의 평가의 단계로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결정에 비해 외부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편이다.
- ④ (○) SWOT(strength, weakness, apportunities, threats)분석 : 조직의 내부환경을 분석하여 대내적 강점 및 약점(strength & weakness) 요인과 외부환경으로부터의 기회 및 위협(opportunities & threats) 요인을 분석·확인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집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 과정, 각 부문과의 관계, 구성원의 역할을 설계하고, 집행에 필요한 지도력의 제공에 초점을 둔.

답 ②

[관련기출]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6 경북 9급

- ① 조직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② 조직 외부와의 정규적인 연계를 추구한다.
- ③ 제한된 합리성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 ④ 조직의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답 ③

### 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며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② 만족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과 정책결정자 개인 차원의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인정한다.
- ③ 점증모형은 정책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본다.
- ④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족모형과 점증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 한다.

해설

- ① (○)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 양적 분석을 강조하므로 정책결정에서 인간의 주관적·질적·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정치적 현실의 역동성(다양한 참여자 간 갈등·대립의 조정·타협)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② (○)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차원에서는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만족할 만한 대안이 선택됨을 설명.
- ④ (×) Y. Dror는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과 정책결정체제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비판하고, 양자를 통합하여 이상주의(합리모형)와 현실주의(점증모형)를 결합시켜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최적모형은 기존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책방향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조정정책결정), 합리모형에 대해서도 정형적인 결정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한된 자원, 선례 없음, 불확실한 상황, 지식·정보 결여 상황인 비정형적인 결정의 경우 직관의 활용, 가치판단, 창의적 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초합리적 아이디어까지 고려할 것을 주장(초합리성)하는 결정모형이다. 조직을 유기체로 보고 경제적 합리성을 기본원리로 삼는 합리모형을 토대로 합리모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초합리성(직관, 영감, 통찰력 등)으로 보완하자는 모형이다.

답 ④

[관련기출]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정책결정에서 인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정치적 현실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②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은 제한된 합리성을 중시하며 정책결정자의 주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 ③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에 따르면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 ④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합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체제론적 입장을 배격한다.
- ⑤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답 ④

### 4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중복성 혹은 가외성(redundancy)의 존재
- ② 행정개혁의 내용이나 그 실행계획의 모호성
- ③ 행정개혁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 ④ 행정개혁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의 어려움

해설

① (×) 행정개혁담당 조직의 가외성은 개혁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혁기구 중복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는 있지만, 개혁에 대한 저항의 발생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발생원인

- ① **기득권의 침해(이익 침해)** : 기득권을 가진 관료나 이익집단·이익당사자는 개혁에 의한 기득권 상실·손실을 우려. 이들 간 강력한 제휴 및 연합관계에 의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고객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관련 행정기관의 소멸·축소에 반발.
- ② **관료의 저항**
  - ㉠ 타성(惰性)으로 인한 저항(관료제의 보수적·현상유지적 경향과 변동에 저항하는 자기방어의식)
  - ㉡ 새롭게 적응해야 할 재교육의 부담, 새로운 상황에의 불안감
  - ㉢ 자신의 업적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여길 때, 자신의 과거의 행동의 정통성이 상실될 때
  - ㉣ 피개혁자의 능력부족(새로운 업무처리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기술의 결여는 저항유발)
  - ㉤ 개혁추진자의 권위·신망이나 정치적 리더십 부족, 개혁성과에 대한 불신
  - ㉥ 집단 간 갈등대립 등의 정치적 요인, 의사전달의 미흡
  - ㉦ 개혁대상자가 소속된 비공식집단의 규범·관례와 개혁의 부조화, 비공식적 인간관계와의 부조화
- ③ **조직 차원의 저항** : 조직의 동태적 보수주의(항구성), 타 조직과 다르다는 조직의 특수성(unicqueness)
- ④ **개혁내용·전략의 문제** : ㉠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개혁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 개혁추진방법의 부적합성, 강압적 개혁 추진이나 참여의 봉쇄, ㉢ 소망스럽지 않은 개혁정책 내용에 대한 불만, 개혁원칙·정당성의 결여, ㉣ 권위주의에 입각한 개혁과정, 비공개적 개혁추진이나 개혁정보의 부족(개혁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성을 띠거나 경직된 문화를 가진 경우, 조직학습이 결여된 경우 반발·무관심을 유발), ㉤ 지나치게 급진적·전면적인 개혁 추진

답 ①

5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② 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③ 정치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한다.

해설

③ (×) 과학적 연구에서는 변화 정도나 양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조작화·계량화가 필요하다. 정책결정요인론은 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변수에 대한 조작화·계량화 측면에서의 불균형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경제적 요인	조작화·계량화가 용이한 변수 많음	⇒ 계량화가 용이한 변수들이 많이 반영됨	상대적으로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함.
정치적 요인	조작화·계량화가 곤란한 변수 많음	⇒ 계량화가 곤란한 변수들은 연구에서 무시됨	

즉, 정치적 요인(정치체제변수)이 지니는 정량적 변수(계량화가 용이한 양적·객관적 변수)는 포함되었지만, 정성적 변수(계량화가 곤란한 질적·주관적 변수)가 포함되지 못해 정치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적절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답 ③

[관련기출]

1. 정책결정요인론의 문제점이나 비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5 경북9급(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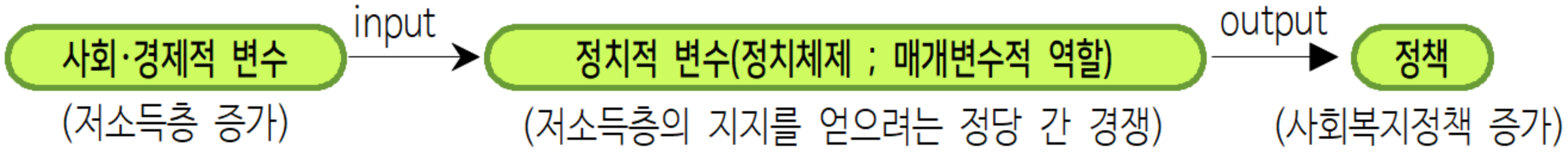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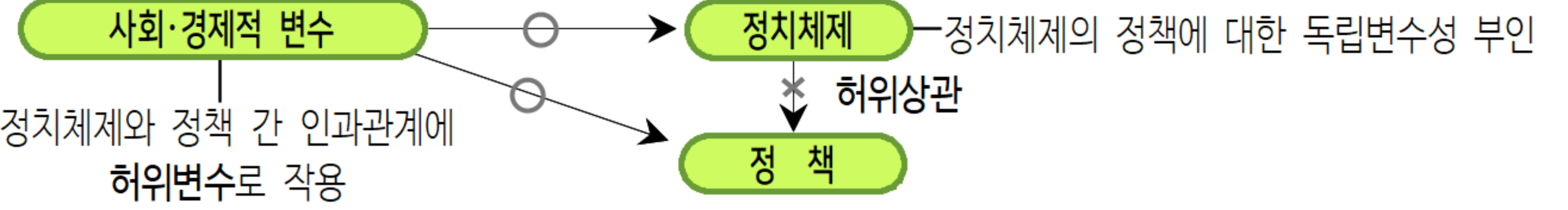

- 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선정 과정상 문제가 있다.
- ② 실제 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정책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정책수준의 차이나 구조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2. 다음 중 정책결정요인론의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2004 국회8급

- ① 정책을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 ② 정책을 환경과 관련시켜 연구하지 않는다.
- ③ Cnudde와 McCrone의 연구에서 혼란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④ 정치적 변수를 과대평가하는 오류가 존재한다.
- ⑤ Dawson과 Robinson의 허위관계에 의하면 경제적 변수는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답 1. ② 2. ③

 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의의	정책내용의 결정·좌우 요인이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사회경제적 요인)인지 정치체제의 특성(정치적 요인)인지의 논쟁. 정책을 종속변수로 보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무엇인지를 제시.
전개	초기 정치학자의 연구 참여경쟁모형 (정치적 결정요인론) ㉠ 정책을 단순히 정치체제의 산출물만 파악하며, 환경의 투입내용에 따라 정책내용이 달라진다고 봄. ㉡ 체제론적 시각, 생태론적 접근, 비교행정·비교정치학 ㉢ 키이(V. Key)와 로커드(D. Lockard)의 참여경쟁모형(세 가지 변수의 순차적 관계)  정치체제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책 사이의 매개변수, 정치체제(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대한 독립변수.
	경제학자들의 연구 (사회경제적 결정요인론) Fabricant는 州 정부 재정지출규모는 환경적 요인인 사회경제적 요인(특히, 1인당 국민소득수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보았다. • 도슨(R. Dawson)과 로빈슨(J. Robinson)의 경제적 자원모형 ㉠ 참여경쟁모형이 제시했던 순차적 관계를 부정하고, 사회경제적 변수는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대해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인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도시화·산업화·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며 사회경제적 요인은 정치적 변수에 의하여 변화되기 어렵다고 주장. ㉡ 정당 간 경쟁이라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허위(spurious)이며 정치체제는 환경으로부터의 변환과정을 담당하는 매개변수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봄. 이는 Key의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재정 및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 
	정치학자들의 再연구 경제적 자원모형 (사회경제적 결정요인론) • 너드(C. Cnudde)와 맥크론(D. McCrone)의 혼합모형(hybrid model)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간접적으로는 정당 간의 경쟁과 참여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 정책에 따라서는 정치적 변수가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한 허위상관을 제외하고도 정책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음을 증명. (정치적 변수의 정책에 대한 독립변수성 인정) 
영향	㉠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이 정치과정의 산물로 보았던 정치학자들의 의견을 비판 ㉡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정치적인 요인(정치이념·정치체제의 차이, 참여·경쟁·타협의 문제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비교정치학 및 다원론에 충격을 가져옴. ㉢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나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점에서, 정책학의 학문적 가능성에 대한 충격을 줌.
한계	변수성정의 문제 ㄱ 사회경제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들을 모두 포함. ㄴ 정치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정치체제의 특성이 포함되지 못함. ㄷ 사회경제적 환경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평가. ㄹ 정치적 변수(정치체제의 특성)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
	조작화·계량화의 불균형 ㄱ 사회경제적 요인은 계량화가 용이한 변수를 이용. ㄴ 정치적 요인은 계량화가 곤란하여 연구에서 무시됨.
	정책수준의 문제 ㄱ 정책의 상위수준(총지출규모) ㉡ 국민소득수준(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음. ㄴ 정책의 하위수준(세부사업별 예산편성) ㉡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음.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의 상위수준 연구에 한정되어 정치적 변수가 경시됨. 예) 저소득층 증가(사회경제적 변수) ㉡ 사회복지예산 50억 증대(상위수준 정책) ㉡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근로자복지, 저소득층복지 등 하위수준의 정책에 분배할 예산액의 결정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함.
	인과관계의 불명확 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무시, 정치체제나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

6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에 대하여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은 정할 수 없다.
- ③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및 교육규칙 등이 있다.
- ④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규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① (○)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법 상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벌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범죄 구성요건의 대강과 형벌의 종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해야 함)이 있으면 벌칙은 과태료·과징금뿐 아니라 형법 상 형벌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상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조항**(조례위반행위자,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자)

㉠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조례위반 행위자에 대한 형벌은 조례로 규정 불가**)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④ (○)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교육규칙 포함)이 있다.** 조례제정권은 지방의회의만의 전속적 권한. 규칙제정권은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교육·학예 규칙)이 가지며, 규칙제정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답 ②

[관련기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 서울7급(지방자치론)

- 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 ②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 ③ 조례로써 독자적인 지방세의 세목 신설이 가능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제는 자치조직 권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 ⑤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써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규정하지 못한다.

답 ⑤

## 7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① (○) 주민소송제도(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 가능)(지방자치법 제22조)

② (○)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③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우리나라 주민소환투표 대상** :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한함

㉠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선거구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③ (×) 지방자치법 19조 2항에 따라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는 지방의회에 한다. (종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하던 간접발안 방식을 2022. 1. 13.부터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직접발안방식으로 전환)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답 ③

## 8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정책은 대외적으로 가치배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내적으로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결정한다.
- ② 규제정책은 국가공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순응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 ③ 분배정책은 집단 간에 ‘나눠먹기식 다툼(pork-barrel)’이 일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 ④ 추출정책은 정부가 집단 간에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켜 그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다.

해설

④ (×) 추출정책이 인적·물적 자원을 국민으로부터 획득하지만 집단 간 재산·소득·권리 등의 배정을 반드시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집단 간 재산·소득·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키는 것은 재분배정책과 관련된다.

• **재분배정책** : 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부, 권리 등과 같은 각종 가치배분의 재조정에 관한 정책으로 복지정책, 사회적 형평성 확보와 관련.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소득분배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옴.

• **추출(抽出)정책** : 국민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 (예) 토지수용, 징병, 과세, 성금).

답 ④

9 우리나라의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 ③ 시보기간 동안에 직권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 ① (x) 시보기간 동안 신분보장이 제한되지만, 시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이 된다.  
cf) 반면,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계산되지 않음.
- ② (o) 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직위를 맡을 수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도 적용되며 전보도 가능하다.
- ③ (x)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결격사유에 직권면직은 없다. 징계로 인한 해임시 3년간, 징계로 인한 파면시 5년간을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④ (x) 시보기간동안에는 신분보장이 제약되지만 시보기간이라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청구가 가능하다.

답 ②

[관련기출]

1. 우리나라 시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군무원7급

- ① 시보기간이 종료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② 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직위를 맡을 수 있다.
- ③ 시보기간 중에 직권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력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의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시보임용은 면제될 수 있다.
- ② 시보공무원은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 ③ 감봉처분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된다.
- ④ 시보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된다.
- ⑤ 시보제도는 선발절차·도구의 하나이다.

3. 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 ②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 ③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④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
- ⑤ 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답 1. ② 2. ③ 3. ②

10 공직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동기는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차별화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 ② 공직동기이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을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공공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으로 가정한다.
- ③ 페리와 와이즈(Perry & Wise)에 따르면 공직 동기는 합리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그리고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 ④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공공관리론의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한다.

해설

- ① (x) 페리(J. Perry)는 신공공서비스론에 입각하여 시민정신에의 부응을 통한 관료들의 동기유발을 중시하면서 공직봉사동기를 강조하였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의 성과급 같은 금전적·물질적 보상 등 재정적·외재적 요인보다는 지역공동체나 국가·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심 등 내재적 요인에 주목하여 공직종사자들이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넘어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조직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주는 동기이다.

구분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관료의 동기유발기제	임금과 편익, 공무원보호(신분보장)	기업가 정신,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공익의 실현 및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공직봉사동기)

☒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 공직동기, 공공서비스동기)이론 - 페리와 와이즈(J. Perry & L. Wise)

- ① 의의 : J. Perry와 L. Wise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민간부문 종사자와 달리 '공공 기관이나 공공조직에서 유일하게 혹은 우선적으로 비롯되어 나타나는 개인적인 성향'인 '공직동기'가 있다고 봄. 페리는 신공공서비스론에 입각하여 시민정신에의 부응을 통한 관료들의 동기유발을 중시.
- ② 공직동기의 의미 :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타적 의도 혹은 공직윤리, 금전적·물질적 보상 등 재정적·외재적 요인보다 지역공동체나 국가·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심 등 내재적 요인에 주목하여 공직종사자들이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넘어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조직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주는 동기.
- ③ 공직봉사동기의 3가지 기본명제 - Perry & Wise(1990)
  - ㉠ 개인의 공공서비스동기가 크면 클수록 개인이 공공조직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려는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다.
  - ㉡ 공공조직에서는 공공서비스동기가 성과와 정(+)의 관계가 있다.
  - ㉢ 높은 공공서비스동기수준을 갖는 사람을 유인하는 공공조직은 개인성과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실용적인 인센티브에 보다 적게 의존할 것이다.
- ③ 공직동기의 차별적 요소

합리적 차원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바탕으로 한 행동	공공정책호감도(attraction to policy making)(공무원의 효용함수는 정책형성 과정에의 참여, 중요한 사회정책에 대한 동일시, 특정의 이해관계에 대한 옹호[지지] 등으로 구성)
규범적 차원	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에 따른 행동, 공익을 수행하려는 욕구	공익 몰입(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예) 공익봉사의 욕구,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심, 의무에 대한 충성심, 사회적 형평성, 약자와 소수에 대한 복지
정서적 차원 (감성적 차원)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감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한 행태(합리적 차원과 달리 효용이 존재하지 않고 희생에 의한 피해만 따름)	동정(compassion)과 자기희생(self-sacrifice) 예) 애국심과 같은 정의감이나 공복으로서의 의무감, 또는 희생을 감수할 만큼의 애정이나 동정,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한 정책몰입

답 ④

<b>[관련기출]</b>	
<p>1.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공무원은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② 경제적 보상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조직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③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에 있어서 내재적 요인 보다 외재적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④ 공무원 입직 이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공직봉사동기의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⑤ 공공부문에 종사하기 이전 성장과정에서 공익을 위한 이타적 성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p>	2020 소방간부
<p>2.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②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페리와 와이스(Perry &amp; 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p>	2021 국가9급
<p>3. 페리(Perry)의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공공봉사동기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공공 부문의 종사자들은 민간 부문의 종사자들과 다른 직업 동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③ 감성적 차원의 동기는 공직자들이 공공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도와 매력을 지니고 있는냐에 관한 것이다.                  ④ 규범적 차원의 동기는 공익에 대한 몰입이며, 공익에 대한 봉사 욕구, 사회적 형평 추구 등을 포함한다.</p>	2017 국가7급(인사·조직론)
<p>4. 동기유발요인으로 금전적·물질적 보상보다 지역공동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심에 주목하는 이론은?</p> <p>① 페리(Perry)의 공공서비스 동기이론                  ②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③ 스키너(Skinner)의 강화이론                  ④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p>	2015 국가7급

답 1. ③ 2. ④ 3. ③ 4. ①

11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료제를 간주한다.
- ② 실적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 ③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절차나 방법을 문서화된 법규형태로 가진다.
- ④ 관료제의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해설

- ① (○)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모형으로서의 근대관료제모형은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는 현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경험적으로 추출하거나 평균화하여 정립한 것이 아니라 사유작용에 의해 가장 합리적으로 작업능률을 극대화시키는 이상적 조직의 조건으로서 정립한 가설적 모형.
- ② (○) 능력(기술적 전문성)에 의한 채용: 모든 직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관료가 담당하며 관료의 채용은 세습이나 정실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정치적 전문성 x)이나 전문능력에 의해 시험·자격증 등 기술적 기준을 통해 공개적으로 채용. 관료는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권위에 의해 임명되며 관료적 권위의 지배를 받음.
- ③ (○) 문서주의: 모든 직위의 업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문서로 이루어지고 문서로 보관됨. 문서화는 업무의 지속성·계속성·안정성을 유지해주고 객관성·정확성·책임성·예측가능성을 높임.
- ④ (x) 구성원은 분업과 전문화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된 업무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짐. 모든 직위는 피라미드식의 계층 내에 배치되며 상하위 계층은 질서정연한 명령복종체계 구성(엄격한 수직적 업무배분)하고 실적에 대해 한 명의 상관에게 책임을 짐.

답 ④

12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공급, 분배와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현상으로 이해한다.
- ② 업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미국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이 제정되었다.
- ③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 ④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해설

① (○) 정치·행정2원론인 행정관리론은 가치판단적 기능을 배제하고,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과정을 중시

정치(의회)	정책결정, 국가의사의 결정	법 제정·정립	가치판단, 목표	권력현상	민주성·대응성·책임성 중시
행정	정책집행, 국가의사의 집행	법의 구체화·실현	사실판단, 수단	관리현상	능률성·전문성·기술성 중시

② (○) 엽관주의가 부정부패와 행정의 비전문성·비능률성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간섭의 배제와 행정의 독자성·전문성·능률성·기술성 확보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883년 펜들턴(Pendleton)법 제정으로 능력·실적 기준에 따른 임용(공채시험)제 도입인 실적주의를 확립시켰고 이는 행정관리론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

③ (×)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태주의는 정치·행정2원론적 시각이다. 그러나 행태주의가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을 두는 것은 아니다. 행태주의는 과학적관리론의 기계적 인간관을 비판하면서, 인간관계론의 인간관계적 측면을 발전시키고, 구조를 강조한 과학적 관리론과 달리 의사결정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행태를 중심으로 행정의 본질을 규명하였다. 또한 문제에서의 정치행정이원론을 행정관리론으로 보더라도 행태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인 19세기 말에 형성된 이론이므로 출현 배경에서 행태주의와는 무관하다.

④ (○) 현대행정국가는 20세기 초 시장실패를 계기로 등장한 큰정부를 의미하지만 행정국가화의 시작은 19세기 말 산업사회의 등장 시점이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도시화의 진전과 도시문제(주거·교통·범죄·산업시설규제 등)의 증가로 인해 엽관주의와 정치인에 의한 행정운영 및 아마추어리즘은 비전문성·비능률성(예산 낭비)을 초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개혁운동으로서 진보주의운동이 전개되었고 이 운동에 앞장섰던 윌슨은 행정학의 효시가 되는 '행정의 연구'를 저술한다.

■ **진보주의 개혁운동**(progressive movement) : 1789년 건국 후 미국 정치체제는 자유주의·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제퍼슨-잭슨철학이 지배.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라는 작은 정부 철학과 아마추어리즘(일반주의)과 공식순환이 행정을 지배. 1829년 A. Jackson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선거전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하는 엽관주의가 도입되어 건국 이후 미국 행정부 내 누적된 특정 지역 및 계층 중심의 관료 파벌을 해체하는 유용한 혁신수단이었음. 그러나 19C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정부 역할이 확대되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이 없는 정당인을 공직에 채용하는 엽관제는 행정의 비효율 유발 원인이 되었고 전문성과 무관한 정당에의 충성을 기준으로 공직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초래됨. 이러한 엽관제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를 혁신하기 위한 공식개혁으로서 진보주의운동이 전개됨. 진보주의 개혁운동가들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 정치적으로는 시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은 능률성 위주의 업무 전문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따라 펜들턴법이 제정되어 정치적 중립과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했으며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채시험제도를 통해 공무원을 채용.

답 ③

[관련기출]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행정을 정치중립적이며 비권력적인 관리현상으로 이해한다.
- ②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과 맥락을 같이한다.
- ③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
- ④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개혁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 ⑤ 행정학이 독립된 학문분야로 등장하였다.

답 ③

### 13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결정의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 ②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면서 얻어진 결과로 본다.
- ③ 공무원의 행동을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돕는 조정자의 역할로 이해한다.
- ④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해설

① (×) 공익은 인식 가능한 실체이며 행동 결정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실체설의 입장이다.

④ (○) 실체설은 공익개념으로서 전체효용의 극대화, 도덕적 절대가치, 공유하는 이익 등을 주장하지만, 과정설은 이러한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 수사(symbolic rhetoric)로 간주한다.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 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비교**

학설	실체설·규범설·적극설	과정설·소극설
공익개념	선험적(先驗的) 개념. 일원적·실체적·적극적 개념 전체효용극대화, 절대가치, 공유의 이익, 보편성	경험적(經驗的) 개념. 다원적·과정적·소극적 개념. 다수 이익 간 조정·타협의 산물, 적법절차의 준수
공익과 사익	공익은 사익과 본질적·질적 차이가 있음 사익을 초월한 공익의 존재(Σ사익 ≠ 공익) - 사익은 공익으로 전환 불가 - 정의, 도덕, 양심, 일반의사 등 실체적·도덕적 개념	공익은 사익과 상대적·양적 차이만 있음 사익이 고려되지 않는 공익은 없음 - 사익을 공익으로 전환 가능. 공익개념의 가변성. - 공익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 타협·조정 결과
사회체제	투입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	다원화된 선진국
사상	전체주의·집단주의(참여 무시)	현실주의, 개인주의(참여 중시), 다원주의
공익 결정자	행정인(소수 엘리트)의 적극적 역할 국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의 목민적(牧民的) 역할	행정인은 소극적 역할만 담당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행정의 조정자 역할
이념	능률성·전문성 강조	민주성 강조



정책 과정	국방·외교정책과 관련 국가주의(statism),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엘리트론	교육·복지정책과 관련 정책결정의 점증모형·다원주의
한계	① 단일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간의 규범적 가치관에 따라 공익관이 달라지므로, 통일적 공익관 도출 곤란. ② 공익개념이 추상적이며 객관성·구체성 결여. ③ 이념적 경직성이 강해 공익 개념 해석에 융통성이 부족하며 국민 개개인의 주장이나 이익을 무시할 수 있음. ④ 소수관료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공익 내용이 결정될 경우 비민주적 결정 초래(전체주의·권위주의 체제)	①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시민이나 잠재집단 및 약자의 이익 반영이 곤란함(활동적 소수의 이익만 반영). ② 도덕적·규범적 요인 경시, 국가이익이나 공동이익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음(집단이기주의의 우려) ③ 특수이익 간 경합·대립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기계적 관념. ④ 토의·협상·경쟁과정이 발달되지 못한 신생국에서는 적용 곤란. ⑤ 대립적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행정인의 가치판단 기능을 소홀히 여김. ⑥ 대립된 이익이 조정된 결과가 특수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음.

답 ①

14 다음 중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는 것은?

- ① 형평성                      ② 민주성                      ③ 절차성                      ④ 투명성

해설

투명성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정부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투명행정은 '열린 정부'를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개'로서 단순한 공개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보장까지 포함하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개념이다. 공개를 하면 정부권력의 독점성과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답 ④

15 정부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이트(D. S. Wright)는 미국의 연방, 주, 지방정부간 관계에 주목하여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으로 구분했다.  
 ② 그리피스(J. A. Griffith)는 영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중세 귀족사회에서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steward)의 관계에 가깝다고 하여 지주-마름 모형을 제시했다.  
 ③ 로데스(R. A. W Rhodes)는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 상호의존 현상이 나타남을 권력의존모형으로 설명했다.  
 ④ 무라마쓰(村松岐夫)는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통제모형과 수평적 정치경쟁모형을 제시했다.

해설

② (×) 첸들러(J. Chandler)가 주장한 내용임

☒ 그리피스(J. A. Griffith)의 중앙-지방의 관계 유형

- ㉠ 자유방임형 :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 독자적인 지식을 습득해나갈 수 있는 경우  
 ㉡ 규제형 : 행정의 표준화 등으로 중앙정부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제하려는 유형  
 ㉢ 장려형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그 결과 지방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는 유형

☒ 첸들러(J. Chandler)의 정부 간 관계 모형

- ㉠ 행정기관모형(대리인모형 ; agency)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인식되며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며 지방정부는 단순히 집행만 담당.  
 ㉡ 동반자모형(partnership)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대등하면서도 상호협력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를 국정운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앙정부의 파트너로 인식.  
 ㉢ 소작인모형(지주-마름모형, stewardship) : 대리인모형을 비판하며 제기된 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 속에 있지만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지방정부는 간혹 정책을 채택 또는 수정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중앙정부(지주)가 지방정부(마름)에게 일정 권한을 정해주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나 이 권한은 언제든지 회수 할 수 있음(영국 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이 중앙정부로 회수되는 과정에서 나온 모형으로 킹덤(J. Kingdom)의 소작인 모형과 같음).  
 ㉣ 상호의존모형(power dependence ; 권력의존형) : 상이한 권한과 자원을 지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존하는 형태.

☒ 학자별 정부 간 관계 모형

구분	독립·경쟁·대등(자율)	종속·의존(통제)	절충(자율+통제) 또는 상호의존
라이트(D. Wright)	분리[동등]권위형·독립형	포괄권위형·내포형	중첩권위형·상호의존형(이상적 형태로 봄)
엘록(H. Elock)	동반자 모형(partnership)	대리인 모형(agent)	교환모형
그리피스(J. Griffith)	자유방임형	규제형	장려형
던사이어(A. Dunsire)	지방자치 모형(local authority)	하향식 모형(top-down)	정치체제 모형(political system)
라조아(A. Lajoie)	정치적 분권	행정권 위임	행정적 분권
찬들러(J. Chandler)	동반자 모형	대리인 모형	소작인 모형, 상호의존모형
월드브스키(A. Wildavsky)	갈등-합의 모형	협조-강제 모형	
무라마츠 미치오(村松岐夫)	수평적 정치경쟁모형	수직적 행정통제 모형	상호의존모형
나이스(D. Nice)	경쟁모형		상호의존모형
로즈(R. Rhodes)	(동반자모형)	(대리인모형)	권력의존모형(전략적 협상모형)

답 ②

[관련기출]

1. 다음 중 정부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1 경찰간부

- ① 라이트(D. S. Wright)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분리형, 중첩형, 포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② 무라마츠(Muramatsu)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통제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③ 대리인 모형에서는 지방은 중앙의 대리인으로 중앙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한다고 본다.
- ④ 절충적인 모형은 소작인모형, 교환모형, 로즈모형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2. 정부 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라이트(Wright)의 이론 중 중첩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 ② 던사이어(Dunsire)의 이론 중 하향식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을 말한다.
- ③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 ④ 월드브스키(Wildavsky)의 이론 중 갈등-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 ⑤ 무라마츠 미치오(村松岐夫)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나눈다.

3. 다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 중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2015 경찰간부

- ① 로즈(Rhodes)의 전략적 협상 관계모형
- ② 킹덤(Kingdom)의 소작인모형
- ③ 라이트(Wright)의 분리권위형
- ④ 엘코크(Elcock)의 교환모형

답 1. ④ 2. ③ 3. ③

16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자원조직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 ②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 ③ 다원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④ 사회자본론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있는 해석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해설

③은 공동체주의와 관련된다.

☒ 시민단체에 대한 해석의 관점

- ㉠ 결사체 민주주의 : 이상적 사회는 많은 자발적 결사체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사회. 정부는 자발적 결사체가 성장·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함.
- ㉡ 공동체주의 :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함(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별하는 시각임). 따라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
- ㉢ 다원주의 : 사회적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정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등장한 것으로 봄. 그러나 이 관점은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시민사회에 대한 설명력이 약함.
- ㉣ 사회자본론 :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자본의 특성은 시민단체의 특성과 일치함.

답 ③

17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 ②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 대표성이 강하다.
-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의·실행기구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해설

①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의 장이 위, 주민자치회 위원은 시·군·자치구의 장이 위촉.

· 주민자치회의 도입 배경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읍·면·동의 기능개편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둠</li> </ul>
↓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체 실행력을 가지기 어려웠고, 읍면동장의 자문 역할을 넘어서 수도 없었음.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선정, 수강료 결정 등이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내용도 주로 취미, 여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짐. 주민자치위원의 선출도 추천과 심의를 통해 선정되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었음.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없는 주민자치, 동행정의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음</li> </ul>
↓	
주민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10.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규정</li> <li>• 2012.1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모델(안)을 제시함. 주민자치회의 지위와 기능, 읍·면·동 사무소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안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 협력형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됨.</li> <li>• 주민자치회 구성은 추천방식을 주요방식으로 하여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상당한 대표성과 개방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함</li> <li>• 주민자치회 권한도 자치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수립·집행,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마을축제 등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실행할 수 있도록 함. 중요한 내용은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의 총의를 모아 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함.</li> </ul>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상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
법적근거	시·군·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 시·군·자치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기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결정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주민자치 기능, 지방정부 위임·위탁사무 처리 주민생활 관련 사항 협의 및 심의
위원구성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접수	일정 주민자치 관련 교육시간을 이수한 지역대표, 주민대표, 일반주민 등 비율 고려, 공개모집 후 공개 추천(대표성 확보)
위촉권자	읍·면·동장이 위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자치구의 장)이 위촉
재정	읍면동 지원금, 프로그램 수강료 한정	자체재원인 사업(위탁)수익, 기부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
지방정부 관계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협력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답 ①

18 다음 중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체제에서의 국가 간 관계로 인해 글로벌 환경은 행정에 사회,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 ② 법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폭이 커지면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잃기 쉽다.
- ③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환경에 의해 심화될 수도 있다.
- ④ 한국사회는 현재 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환경은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낮다.

해설

④ (×) 한국사회는 현재 파편화·단절화가 지속되면서 공동체의식은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는 다양한 파생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답 ④

19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탈관료화 현상의 하나로 등장했다.
- ②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화, 낮은 수준의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 ③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이다.
- ④ 업무처리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② (×)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인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모두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즉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권한·책임의 명확한 편제는 곤란하며(복잡성 낮음), 법과 규칙·절차에의 의존도도 낮고(공식성 낮음), 분권화된다(집권성 낮음).

조직구조 변수	기본변수			상황변수			
	조직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규모	기술	환경
관료제(Bureaucracy)		↑	↑	↑	대규모	일상적·정형적	안정·확실
탈관료제(Adhocracy)		↓	↓	↓	소규모	비일상적·비정형적	불안정·불확실

④ (○) adhocracy는 조정·통합을 중시하지만 이질적 구성원에 의한 유동적·비계층적 구조이므로 조정과 통합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조정과 통합 및 의사소통비용이 과다).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구조의 변경과 재설계 문제에 대한 관심에 편중하여 인간본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조직구조의 잠정성에 따른 이합집산, 명령계통의 다원화에 따른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고, 조직구성원의 새 업무에 대한 적응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관료제와 Adhocracy

구분	관료제(Bureaucracy)	동태적 조직(Adhocracy ; 탈관료제 조직)
특징	폐쇄성 - 기계적·정태적·경직적 구조 • 조직에 충성, 상하 간 명령·복종관계 • 정당성의 근거는 직위, 일상적·정형적 조직활동 • 생애직·전임성, 역할의 특정성이 강함.	개방성 - 유기적·동태적·신축적 구조 • 사업계획에 충성, 상하 간 자율적·협동적 관계 • 정당성의 근거는 전문지식, 비일상적·비정형적 조직활동 • 직업의 유동성 보장, 역할의 특정성이 약함.
상황	• 정태적이고 단순한 환경(안정적 환경), 확실한 목표	•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불안정적 환경). 다양하고 가변적인 목표
기술	• 일상적·정형적 기술	• 비일상적·비정형적 기술
고객관	• 조직과 환경(고객)과의 경직된 경계 • 공급자 중심	• 고객과 행정의 경계타파(탈경계) - 고객을 동료처럼 대함. • 고객중심행정
조직구조	<높은 수준의 구조변수> • 수직적 분화·전문화(계층구조), 수평적 분화 • 계층제 수준이 높고 계선 중시 • 높은 수준의 공식화·표준화 - 규칙과 절차의 강조 • 권한의 상부집중(집권성), 단일적 권위구조 • 조직의 존속과 구조배열의 항구성	<낮은 수준의 구조변수> • 수평적 분화·전문화(평면구조), 저층구조 - 통솔범위 넓음 • 계층제 수준이 낮고 막료 중시 • 낮은 수준의 공식화·표준화 - 업무수행 기준·절차는 상황적응적 • 권한의 하부위임(분권성), 다원적 권위구조 • 조직의 존속과 구조배열의 잠정성

답 ②

[관련기출]

1.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탈관료화 현상의 하나로 등장했다.
- ② 유기적인 조직으로 평면조직에 가까우며 융통성 있는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공식화를 특징으로 한다.
- ④ 매트릭스 조직,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네트워크 조직이 여기에 속한다.

2.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 ②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 ③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이다.
- ④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구조이다.

2017 사회복지9급

답 1. ③ 2. ①

20 기존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주도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 ② 현장 행정에서 복합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서비스 전달방식은 수요기반 온·오프라인 멀티채널이다.

해설

③ (×) 기존 전자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능형 정부는 그에 더해 사용자의 일상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개인비서와 같은 지능화된 맞춤형서비스 제공  
 • 문재인 정부의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의 내용(W.I.S.E.)에서 출제됨.

목표(WISE)	구분	AS - IS	TO - BE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Wonderful Mind-Caring Gov.)	지향목표	사용자 경험(UX)	시민경험(CX)
	제공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생애주기+일상 틈새 비서서비스
	전달방식	온라인 + 모바일 채널	On-Demand O2O(online 2 offline)기반 멀티채널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Innovative Problem-Solving Gov.)	업무프로세스	국민/공무원 문제 제기 ⇨ 개선	인공지능 사전 문제 인지 ⇨ 스스로 대안 제시 ⇨ 개선
	정책·의사결정	지식기반의 과학행정	분석기반의 투명·첨단행정
	현장행정	단순업무 처리 중심	복합문제 해결 가능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Sustainable Value-Sharing Gov.)	국민 역할	1인 1역(서비스 사용자)	1인 다역(서비스 생산·공유·사용자)
	민관협력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	국민 주도의 정책결정
	대상국민	문서기반의 시티즌십	디지털기반의 시티즌십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Enhanced Safety-Keeping Gov.)	사회안전	느슨한 수동적 안전망	튼튼한 선제적 안전망
	생활안전	양적·효율적 생활인프라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
	보안기반	위험대응형 사후보완	위험인식형 자기보안

☒ 문재인 정부의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

- ㉠ 추진배경 :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 여건 성숙, on-line에서 Anywhere 전자정부로 추진방향 전환 필요
- ㉡ 지능형 정부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실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디지털 新정부
- ㉢ 비전과 목표 : 6개 핵심가치(공정·투명·유연·신뢰·창의·포용)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WISE 정부"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목표(W.I.S.E.)를 추구

목표(WISE)	의미	과제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Wonderful Mind-Caring Go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경험이 아닌, 서비스 대상, 채널 및 접근방식 확대와 전환을 통한 모든 시민의 디지털 경험을 극대화</li> <li>•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물론, 사용자의 일상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개인비서와 같은 지능화된 맞춤형서비스 제공</li> <li>•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연결된 채널(민간포함)을 통해 사용자 환경(사람, 사물, 세상 등)을 인식·판단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전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알아서 제공하는 'Before Service' 구현</li> <li>② 3-Any(Any-Time, Any-Where, Any-Channel) 개인비서 서비스 실현</li> <li>③ 민의(民意) 분석 '로보틱스 플랫폼' 구축</li> </ul>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Innovative Problem-Solving Go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기반 행정시스템(로보틱스)이 정부 내 관련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전반을 끊임없이 학습하여 스스로 개선안 제시</li> <li>• 사용자 및 이용패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공무원의 개입·조정 없이도 '숨은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제안</li> <li>•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b>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완료할 수 있는 현장행정체계 구현</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가학습기반 선제적 행정 프로세스로 재설계</li> <li>② 블록체인 행정플랫폼으로 신뢰사회 구현</li> <li>③ 기동성 있는 현장행정(Agile Work) 고도화</li> </ul>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Sustainable Value-Sharing Go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과 정부가 프로유저(pro-user ; provider+user)로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생산·공유·사용하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파트너십 구현</li> <li>•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인프라와 데이터를 통해 <b>국민주도의 정책결정</b> 및 국민이 직접 완성하는 공공서비스 확대</li> <li>• 연령, 국적, 인증 등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디지털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능형 데이터 민관 분석·공유체계 구축</li> <li>② DIO(Do It Ourselves) 사이버마당 구현</li> <li>③ 디지털 新산업 하이브리드형 생태계(공공선도형 신산업 육성과 시장주도형 신산업 육성 방식의 융합) 조성</li> <li>④ 사회배려자를 위한 디지털 밀착서비스 구현</li> <li>⑤ 국경 없는 B-ID(Blockchain-ID) 도입</li> </ul>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Enhanced Safety-Keeping Go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측이 어려운 복합적 사회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감지·예방체계 재정비 및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역량 강화</li> <li>•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구축된 생활인프라(가로등, 공공시설, 도로 등)를 생활안전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로 전환</li> <li>• AI 오작동, 지능형 사이버 공격 등 신기술 부상에 따른 역기능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분석하고, 능동형 보안체계로 업그레이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안전망 구현</li> <li>② 자가진화형 사이버 안전 기반 구축</li> </ul>

21 켈리(Kelly)의 귀인(歸因)이론에서 주장되는 귀인의 성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단대상 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② 판단대상이 다른 상황에서는 달리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③ 판단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④ 판단대상 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에 대해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해설

- ① (×) 표현 자체가 전혀 맞지 않음
  - 동일 상황에서 판단대상 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은 경우(합의성 높음) ⇨ 외부귀인
  - 판단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은 경우(특이성 낮음) ⇨ 내부귀인
- ② (○) 판단대상이 다른 상황에서는 달리 행동하는 정도가 높음(특이성 높음) ⇨ 외부귀인
- ③ (○) 판단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음(일관성 높음) ⇨ 귀인 판단 가능(단 켈리의 초기이론에서는 내부귀인으로 봄)
- ④ (○) ①번 해설 참조

답 ①

☒ 켈리(H. Kelley)의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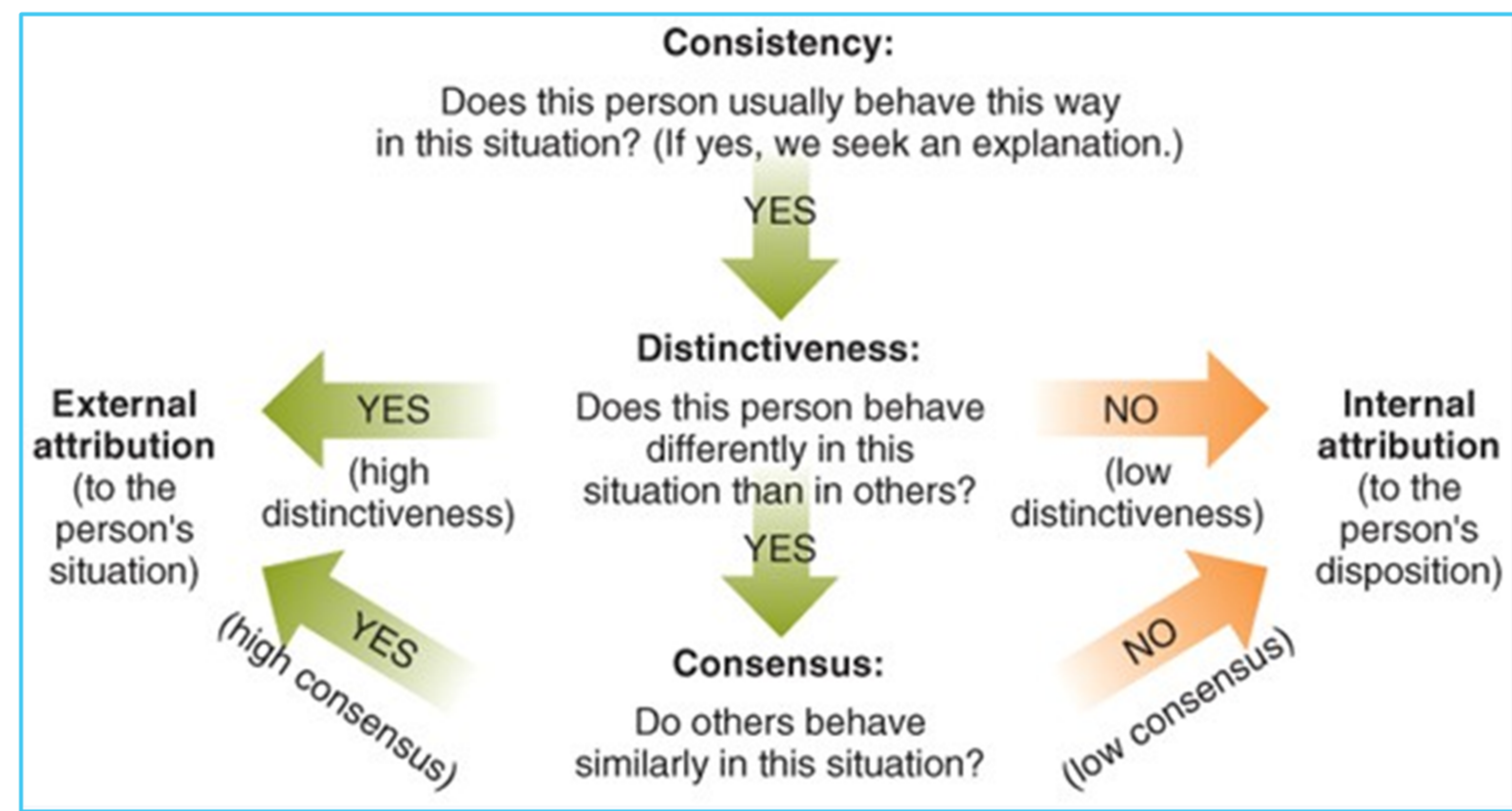
- ① 귀인이론 : 사람들이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
- ② 귀인 분석 : 개인의 행동 관찰시 행동의 원인이 내적 요인(개인의 능력·동기·경험·기술 등)인지 외적 요인(업무특성, 상급자의 특성, 직무환경, 운 등)인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차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귀인판단을 내림.
  - ㉠ 일관성(동일성 : consistency) : 이 사람은 항상 동일한 행동을 했는가? - 행동의 일관성·동일성 분석(과거의 행동과 비교)
  - ㉡ 합의성(일치성 : consensus) :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가? - 다른 사람의 행동과의 일치성 분석(타인과 비교)
  - ㉢ 특이성(구별성 : distinctiveness) : 이 사람의 행동은 이 상황에서만 특이한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가?) - 그 상황에서의 행동의 특이성 분석(다른 상황에서의 행동과 비교)

③ 귀인판단과 행동(Kelley, 1973년)



• Kelley의 종래 이론에서는 일관성이 낮고 합의성·특이성이 높으면 외부 귀인으로, 일관성이 높고 합의성·특이성이 낮으면 내부 귀인으로 보았으나 1973년 수정된 이론에서는 일단 일관성이 높다는 전제가 되어야 귀인판단이 가능하다고 봄 - 국내 교수님들 책에는 대부분 수정된 이론이 잘 소개가 안 되어 있고 기존 이론만 수록됨.

※ 아래 내용은 Kelley의 1973년 저술 원문 내용을 도식화한 것.



【관련기출】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 2개)

2018 국가7급(인사·조직론)

- ① 행동의 원인이 외재적인지 내재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특이성(distinctiveness)은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평가할 때 외재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내재적 요인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근본적인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한다.
- ③ 어떤 부서에서 특정 직원만이 일을 소란스럽게 하며, 매주 여러 번 그렇게 하며,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 직원의 내재적 요인이 그러한 행동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자신의 성공 원인은 주로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재적인 요인에서 찾는 반면, 실패 원인은 지원 부족, 동료의 비협조 등 외재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을 자기실현적 귀인편향(self-fulfilling bias)이라고 한다.

**해설**

- ① (○) 특이성(distinctiveness)은 개인의 행위가 특정 상황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면 낮은 특이성, 특정 상황에서만 그 행동을 보이면 높은 특이성을 갖는다. 인사혁신처 측 정답은 ③으로 처리되었으나 ③의 사례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동일 행동)는 것'은 특이성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특이성의 의미는 다른 상황에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어야 맞다. 대부분의 기출문제 해설집들이 ①번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보고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특이성이라 하고 있으나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 행동을 한다면 전혀 특이성이 없는 것이므로 잘못된 내용이 된다. 특이성은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련되며 다른 행동을 한다면 특이성이 있게 된다. 국내에 출간된 교수들 저서 중 일부에서는 특이성을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정도로 표현하고 특이성이 높은 경우 내적 귀인으로 판단한다고 쓰인 경우가 있으나 잘못된 내용으로 보인다. 외국 사이트의 문헌들을 보면 특이성은 개인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an individual displays different behaviors in different situations 또는 act differently in other situation)이라 하고 특이성이 높은 경우 외적 귀인으로 판단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 ② (×) 근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타인의 (부정적) 행동을 평가할 때 외재적 요인(상황 요인)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행위자의 성격·동기·태도·능력·신념 등 내재적 요인(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 ③ (○) 켈리(H. Kelley)의 귀인이론에 따르면 어떤 개인의 행동이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 합의를 특이성이 낮으면 행동의 원인이 내재적 요인 때문이며 합의성과 특이성이 높으면 행동의 원인이 외재적 요인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어떤 부서에서 특정 직원만이 일을 소란스럽게 하며(합의성 낮음), 매주 여러 번 그렇게 하며(일관성 높음),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면(특이성 낮음) 그 직원의 내재적 요인이 그 행동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 • **이기적 편견(자존적 편견, 자기보호오류, 자기고양적 귀인편향)(self-serving bias)** : 자신의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외재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내재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것(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성공에 대한 개인적 공로는 강조).  
 •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로젠탈 효과[Rosenthal effect]) 또는 피그말리온(Pygmalion) 효과** : 누군가에 대한 타인의 믿음이나 기대, 예측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 즉,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은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기대와 동일선상에서 지각하려는 경향으로 기대치가 높을 때 높은 업무성과를 보이고 기대치가 낮을 때 낮은 업무 성과를 보이는 경향.  
 \* **정답 여부** : 이 문제 정답은 ③으로 처리되었으나 ①도 틀린 내용이 아니므로 답을 ①③으로 본다.

답 ①③

【관련기출】 켈리(Kelly)의 귀인이론에서 주장되는 귀인의 성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7급

- ① 개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② 개인이 다른 사건에서 달리 반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③ 개인이 다른 사건에서 미래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④ 개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해설**

- ① (○) **합의성(일치성 : consensus)** :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가? -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성 분석(타인과 비교) 합의성이 높다면 내적 요소보다는 외적 요소에 귀인(행동의 원인 판단)하려함.
- ② (○) **특이성(구별성 : distinctiveness)** : 이 사람의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만 특이한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가?) - 그 상황에서의 행동의 특이성 분석(다른 상황에서의 행동과 비교). 특이성이 높다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내적 요소보다 외적 요소에 귀인하려 함
- ③ (×) 틀린 지문으로 일부러 만든 것으로 보임. 합의성·특이성·일관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건이 아님. 만약 일관성이 높고 특이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면 내적 귀인으로도 연결은 될 수 있다.
- ④ (○) **일관성(동일성 : consistency)** : 이 사람은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였는가? - 행동 또는 결과의 일관성·동일성 분석(과거와 비교). 일관성이 높은 경우 내적 요소에 귀인하려한다는 것은 켈리가 중전이론에서 주장한 내용(이후 수정된 이론에서는 일관성이 낮으면 귀인판단이 곤란하고 일관성이 높음을 전제로 하여 특이성·합의성을 통해 귀인판단).

답 ③

**2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비독립형단독제 기관으로서 총무처를 두고 있었다.
- ② 1999년 독립형 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자치부와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되어 정부 인사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 ③ 2008년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이후 2013년까지행정안전부를 거쳐 안전행정부로 인사관리기능이 독립형 단독제 기관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 ④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신설 되어 현재까지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형태로 중앙인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해설

② (×)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비독립 합의제 기관이었음.

<행정부 중앙인사기관의 연혁>

- 1948년 정부수립 후 총무처
- 1955년 국무원 사무국 ⇨ 1960년 국무원 사무처
- 1963년 총무처 인사국
- 1998년 행정자치부 인사국 (\* 총무처 + 내무부 ⇨ 행정자치부)
-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2원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사사무 일부를 이관받아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비독립 합의제 기관) 설치.
-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업무 1원화.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윤리·복무·연금업무 제외)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행정안전부 인사실이 인사기능 통합하여 담당. 중앙인사위원회 폐지.
- 2013년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2014년 안전행정부 인사기능을 이관받아 국무총리 직속 인사혁신처(비독립 단독제형) 설치

답 ②

[관련기출] 인사행정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9급

-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 ② 비독립단독형은 인사행정의 정실화와 기관장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다.
- ③ 독립단독형의 조직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고 흔하다.
- ④ 비독립합의형은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청(FLRA)과 과거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 ⑤ 독립합의형은 행정수반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관리 수단을 제한한다.

답 ③

2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술(technology)과 집권화의 관계는 상관도가 높다.
- ② 우드워드(J. Woodward)는 대량 생산기술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 ③ 톰슨(V. A. Thompson)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개인 간 상호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다.
- ④ 페로우(C. Perrow)는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유형화했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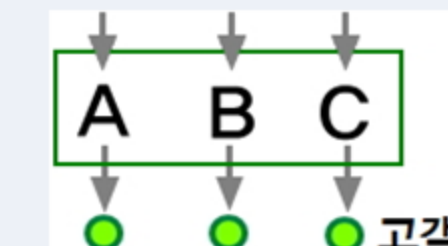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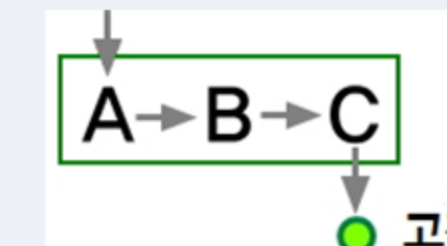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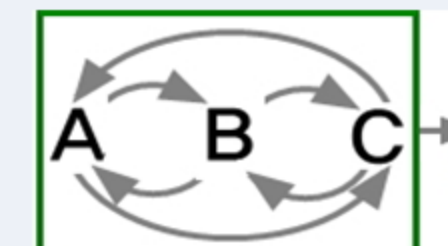
① (×) 기술과 집권성은 대체로 양자의 상관도가 비교적 낮으며, 타 변수의 개입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대체로 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되고,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② (○) ■ 우드워드(J. Woodward)의 기술유형론 - 기술의 복잡성

• 기술의 복잡성 : 생산과정의 통제가능성과 그 결과의 예측가능성 정도. 소단위생산체 ⇨ 대단위생산체 ⇨ 연속생산체로 갈수록 기술의 복잡성 증가,

기술의 복잡성	조직유형	특징	예	전문화	조정 요청	적합한 조직유형
높음	과정(process)생산체제 (연속생산체제)	표준화되고 반복적이지만,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비일상적 문제에 대비하는 기술	원유정제, 화학제품 제조업, 제약업	낮음	높음	유기적 비관료제적 조직
중간	대량(mass)생산체제 (대단위 생산체제)	표준화·기계화되고 예측 가능한 기술	기성복, 공산품(자동차, 칫솔)	높음	낮음	기계적 관료제적 조직
낮음	단일상품(unit)생산체제 (소단위 생산체제)	비일상적·비표준적 기술	맞춤복, 선박, 항공기	낮음	높음	유기적 비관료제적 조직

③ (○) ■ 톰슨(J. Thompson)의 기술유형론 - 기술의 상호의존성

구 분	중개적 기술 (mediating technology)	길게 연결된 기술(연속형 기술) (long-linked technology)	집약적 기술 (intensive technology)
의 미	상호의존상태에 있거나 서로 의존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기술. 단위부서 간 과업 관련성은 없음.	여러 활동이 순차적 의존관계에 있을 때 사용하는 기술(A부서 산출물이 B부서 활동의 투입이 됨)	특정 대상물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모은 다양한 기술의 집합체. 개별 고객의 성격·상태에 따라 다르게 배합되는 기술.
예	은행(예금자-대출자 간 연결), 직업소개소, 공인중개사	대량생산조직 - 연속적 공정(화학공정), 컨베이어 시스템, 조립라인	맞춤기술·주문기술(종합병원에서의 치료, 건축업)
상호 의존성	집합적(공동적·집단적; pooled)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 가장 낮음 일방향 집중형 - 상호독립적 (예 은행직원의 저축상품 판매업무)	순차적·연속적(sequential)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 높음 연쇄고리형(선후관계로 연결)	교호적·호혜적(reciprocal)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 가장 높음 쌍방향 상호의존형 (모든 업무담당자가 협력해 생산)
조정방법	표준화(standardization)	계획(planning and scheduling)	상호적응(mutual adjustment) - 표준화 곤란
갈등·조정	갈등 낮음(조정 용이)	갈등 중간(조정 곤란도 중간)	갈등 높음(조정 곤란도 높음)
생산비용	낮음	중간	높음
복잡성·공식성	일상적 기술 : 복잡성 낮음, 공식성 높음	복잡성·공식성 중간	비일상적 기술 : 복잡성 높음, 공식성 낮음
추가적 방법	전담직위로 참모 설치	위원회 설치	Project Team, Task Force



④ (○) 페로우(C. Perrow)의 기술유형론 - 기술의 불확실성

- 탐색과정에서 예외적 사례의 수 - 과업(문제)의 다양성[변화성] - 정보의 불확실성
- 원료처리에서 채택하는 탐색과정 - 문제의 분석가능성(표준화된 절차에 의한 업무처리 정도) - 정보 모호성과 반대

구분	과업의 다양성 낮음(소수의 예외) - 정보의 불확실성 낮음	과업의 다양성 높음(다수의 예외) - 정보의 불확실성 높음
문제의 분석가능성 낮음 (비일상적 탐색)   해결 곤란 (정보모호성 높음)	<b>장인(craft ; 기능·기예)기술</b>	<b>비일상적(non - routine) 기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로 유기적 구조</li> <li>- 중간정도 공식화</li> <li>- 중간정도 분권화</li> <li>• staff 자격 : 작업 경험</li> <li>• 중간정도 통솔범위</li> <li>• 조정·통제 : 수평적, 구두 의사소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불확실성 낮고 정보모호성 높음.</li> <li>• 소량의 풍성한 정보</li> <li>• 하이터치 : 개인적 관찰, 면접회의</li> <li>*지혜·직관·경험 등 무형적 요소에 의존.</li> <li>• 사례 : 고급 유기구조 생산공장, 도예, 연주, 공연산업 등</li> </ul>
문제의 분석가능성 높음 (일상적 탐색)   해결 용이 (정보모호성 낮음)	<b>일상적(routine) 기술</b>	<b>공학(engineering) 기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적 구조</li> <li>- 높은 공식화</li> <li>- 높은 집권화</li> <li>• staff 자격 : 낮은 훈련과 경험</li> <li>• 넓은 통솔범위</li> <li>• 조정·통제 : 수직적, 문서 의사소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불확실성 높고 정보모호성 낮음.</li> <li>• 다량의 계량적 정보</li> <li>• 하이테크 : 데이터베이스, 경영정보시스템(MIS),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등</li> <li>• 사례 : 주문생산기술, 회계, 변론 등</li> </ul>

답 ①

24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량적 기법을 응용하여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측정한다.
- ② 정량평가라고도 하며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방법 등이 해당한다.
- ③ 정책대안과 정책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떠한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 ④ 대부분 데이터 수집을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등의 방법에 의존한다.

해설

④ (×) 참여관찰법, 심층면담(심층면담), 투사법, 집단면담, 등은 정책평가의 비계량평가(질적 평가)기법이다.

정책평가방법의 유형은 분석 자료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hard data)의 수집을 강조하는 양적·계량적 방법과 직접적인 관찰이나 심층면담에 의한 자료수집을 강조하는 질적·비계량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 평가방법은 실험적 방법과 그의 변형들 및 비참여조직적 관찰법, 표준화 면접법 등이 포함되는데, 평가하는 바를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하여, 과학적 분석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반면에 질적 방법에는 참여관찰법과 심층면담법과 같은 평가방법이 사용되며, 통계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형태를 잘 포착할 수 있다

※ 계량평가(양적 평가)와 비계량평가(질적 평가)

계량평가(양적 평가) : 객관적 평가	비계량평가(질적 평가) : 주관적 평가
주로 정책집행 결과 나타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	정책사업 수행 과정의 난이도,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 결과 등을 평가
인과관계의 발생정도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how many) 있는가를 분석	해석적·창의적·개인적·서술적 접근을 하며 무엇이(what), 어떻게(how) 이루어졌는지 분석.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	주로 귀납적 방법을 활용
통계, 실적치, 비율 등 수치화되어 있는 강성자료(hard data) 활용	주로 면접, 관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축적된 연성자료(soft data) 활용

• 주로 효과성 평가는 양적 평가에 의존하고, 집행과정평가는 질적 평가에 주로 의존. 집행과정평가는 기획한 대로 자원이 투입되었는지 또는 제 활동 등이 사업계획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며 '얼마나 많이(How many) 있는가?'보다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What things exist?)'에 관한 분석에 의존하므로 양적 방법보다는 질적 방법에 의함.

• 질적 평가 자료의 원천 : ① 심층 면담(정보제공자의 경험·태도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방식), ② 집단 면담(여러 사람이 모여 포괄적인 의견 교환), ③ 참여자 관찰(참여자가 일일활동에 직접 참여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 ④ 투사법(projective technique ; 응답자가 답변을 주저하는 경우, 다른 사항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자료를 수집·분석)

답 ④

[관련기출]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 국가7급

- ① 정책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 ② 정책평가의 양적 기법으로는 참여관찰법, 심층면담법 등을 들 수 있다.
- ③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결과와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과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
- ④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준실험적 방법보다는 진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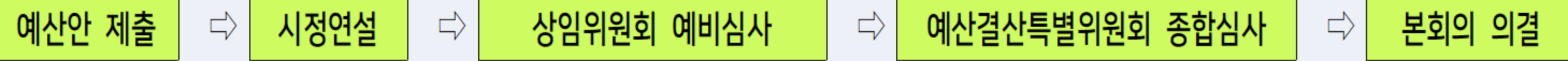
답 ③

25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시정연설 후에 국회에서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심사를 하고 의결을 한다.
- ②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관리통제기능이다.
- ③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당이 영향을 미친다.
- ④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의원내각제인 나라에 비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해설

① (×) 예산심의 절차



- ② (○) 예산심의과정이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타당성이 결합되어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재정동의권을 부여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통제의 주요 수단이 됨.
- ③ (○) 정당은 정강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할당되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 ④ (○)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의원내각제에 비해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 관계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막강하고 예산심의가 엄격하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이므로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심의가 엄격하다. 다만, 예산안 심의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큰 수정을 가하지 않는다. 국회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 기준 없이 추상적·정치적으로 조정하며 한계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예산결정의 주도자가 아니며 수동적 역할을 수행한다.

답 ①

[관련기출]

1.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는 동시에 진행된다.
- ②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없다.
- ④ 예산과정에 있어 본회의는 형식적 성격이 강하다.
- ⑤ 예산주기는 3년이다.

2.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9급

-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다음 내용 중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5 국회9급, 2013 지방9급

-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하에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4.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기술로 맞는 것은?

2015 교육행정9급

-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 ②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 예산안 제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시정연설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을 다시 하급기관에 재배정한다.
- ④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폐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5. 국회의 예산심의절차를 순서에 맞게 연결한 것은?

2017 소방간부

- |                      |                |                   |
|----------------------|----------------|-------------------|
| ㉠ 대통령 시정연설           |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 조정  |
| ㉦ 부처별 심사             | ㉧ 본회의 심의·승인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답 1. ① 2. ② 3. ④ 4. ③ 5. ②